

# 국가AI컴퓨팅센터 다시 추진...광주시, 유치 총력전

### 국가AI전략위 출범... 구축사업 추진 방안 발표 민간지분 70% 초과... 출자금 매수청구권 삭제 2028년까지 GPU 1.5만장 확보... 정부, 3차 공고

광주시가 유치를 나선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다시 공모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초기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차례 유찰되자 과기정통부가 공모요건을 대폭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를 추진했지만 1·2차 모두 유

찰되자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 구조, 매수청구권,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등 공모요건을 조정하고 센터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지분 구조는 민간 주도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이뤄진다. 기존 지분구조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 민간 70% 초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이 전문성을 살려 주도하는 구조다. 서비스 유행과 요금은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민간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의 AI 연구·개

발, 요금 할인 등 서비스 지원 방안은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관 출자, 정책금융 대출 등을 총 2조원 이상 투입한다. 최종 출자금은 지분 구조를 고려해 민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공공 출자금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삭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도 기존에는 1~10%에 그쳤는데, 15~25%로 확대된다. 아울러 2030년까지 50% 도입이 부담된다는 의견에 따라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 확보하고 2030년까지 지속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7년 이

내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면 평가시 우대사항이다. 이번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참여계획서는 다음달 20~21일 양일간 접수받는다. 이후 1단계 기술·정책 평가, 2단계 금융심사를 거쳐 SPC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를 서울 섬유센터 별관 3층 텍스파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미 AI 집적단지에 5만㎡ 규모 부지와 120MW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AI 1단계 사업을 통해 성과를 축적해 온 점을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운다. 여기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확정된 6000억원 규모의 AI 2단계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연계해 국가 AI 시범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지사가 8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남 동부 이민국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전남이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노동자 권익보호·인프라 확충 협력체계 구축 전남도, 민주노총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논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도청에서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등 간부진과 만나 전남 노동정책의 현안 해결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면담에는 이병용 본부장을 비롯해 임미영 수석본부장, 선진래 사무처장, 정오균 선전국장이 참석했다. 면담에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동부권 지역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전남도의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산업안전 분야 등 노동분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해 현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올해 말까지 위

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동부권 지역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여수·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집중된 동부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남도는 현재 화순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동부권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 전남 동부권 외국인 주민 정착 돕는다

### 도, 여수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개소

전남도는 8일 여수 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부권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정치 주광주 중구 총영사, 전남도의원, 관계기관장, 외국인 주민과 커뮤니티 대표 등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권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종합 거점으로, 언어·문화 장벽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둔다. 생활·행정·의료 분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법률·노동·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한다. 또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교육,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실시, 국가별 자조모임 운영하고 지역특화비자(E-7-4R, F-2-R) 등 체류자격 전환 상담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장기 체류를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외국인 주민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전남의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다"며 "외국인을 인구조

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제도를 개선해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마련,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포용적 공동체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소비쿠폰 1차 신청 12일 마감 시, 99% 2700억여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됨에 따라 광주시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은 대상자 138만9000여명 중 99%인 137만6000여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총 2700억여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광주시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와 발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2800여명이 이용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 신규시책 발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밀착·경제·전략산업 3개 분야...1조612억 규모

전남도가 도민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고 다가올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밀착 복지·안전, 지역경제와 고용기반 강화, 미래대응 전략산업 등 3개 분야 200건의 2026년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612억원(국비 5136억원·도비 2125억원·기타 3351억원)이다. 특히 전체 200개 신규사업 가운데 62건은 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체감도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민 행복시책으로 별도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밀착 복지·안전 분야는 주거와 교통, 복지와 보건, 환경과 교육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 104개로 채워졌다. 독서문화를 확산해 일상 속 학습과 여가를 지원하는 문화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 도민이 직접 체감할 작은 변화들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

하겠다는 전남도의 확고한 정책적 방향이 담겼다. 지역경제와 고용기반 강화 분야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비롯해 외국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다. 창업 지원, 고용안정, 인력 양성 등 39건의 과제를 통해 지역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대응 전략산업 분야는 인공지능, 우주, 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해양물류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57건이 추진된다. 전남의 강점을 살려 첨단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